

■ 한나라, 세종시 대처 고심

'수정안' 놓고 親朴과 표대결로 가나

내년 1월 최종안 제시 앞두고 충청권 민심 변수 '2~5개 부처 이전·자족성 보완' 절충 가능성도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내년 1월로 남긴 가운데 여론에서는 두 가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8일 현재 한나라당 주류 측 내부에는 "끝내 설득이 안 되면 원안대로 가려는 것 아니냐"는 이른바 '출구전략론'을 놓고 '가능하다'는 예상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이 상충하고 있다.

우선, 출구전략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부류는 야권과 충청권의 세종시 수정 반대가 극렬해진다며 여권이 '무리수'를 뒤흔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친박계의 반대가 계속되는 한 세종시 수정은 어려워지는 만큼 정부가 수정안을 내놓더라도 여론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물러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있다.

이 같은 주장의 이면에는 세종시 수정이 좌절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의 정국 주도권이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깔려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을 포기하더라도 이 대통령은 레일덕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며 "2월 조기전당대회 등 국면전환용 카드가 많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친이계 상당수 의원들은 '출구전략'을 역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여론전 승리를 자신하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도 세종시 수정

포기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것.

이들은 이 경우 이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을 밀어붙이기 위해 내년 1월 한나라당 의원총회를 소집, '세종시 원안고수'라는 현재의 당론을 바꿀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169명의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세종시 수정에 반대하는 친박(친 박근혜)계 60여명이 반발해도 과반수 찬성에 따라 이 같은 당론 채택은 가능하다.

지난 7일 방 정몽준 대표, 안상수 원내대표, 장광근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의 '화합수 회동'도 전열정비를 위한 자리 아니었겠느냐는 풀이도 있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세종시 원안(原案)의 정부 부처(9부2처2청) 이전을 백지화하는 수정안 초안을 슬쩍 내놨지만 결국은 세종시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2~5개 부처를 이전하고 자족성을 일부 보완하는 절충안 성격의 대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들의 시각은 결국 세종시 정국의 방향은 여론이 좌우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대안에 대해 국민의 다수가 수정안에 찬성하고, 직접 당사자인 충청도민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면 자연스럽게 세종시 논란은 종결될 것지만 여론이 나빠지거나 찬반 양면이 팽팽할 경우에는 내년 1월 이후 정국은 세종시를 놓고 여야 또는 여론 내부에서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충청지역에서 세종시에 대한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를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괴문서'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세종시 문제의 이해'라는 49쪽 분량의 문건을 공개하며 "민심이나 여론 조작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퇴 3인방' 복귀 명분찾기 나선 민주

(천정배·최문순·장세환)

김형오 의장에 "사회권 거부" 최후통첩... 사퇴 철회 결의키로

민주당이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 등 '의원직 사퇴 3인방'의 퇴로 열기에 부심하고 있다.

미디어법 처리에 반발, 김형오 국회의장에 의원직 사퇴서를 낸 뒤 장외에 머물고 있는 이들에게 복귀의 명분을 찾아주기 위해 수순밟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이들 3인은 지난 1일 미디어법 재논의를 요구하며 의정실에서 접거 농성을 벌이다 강제퇴거되자 국회 분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7~8일 국회 본회의 일정을 감안, 잠시 자리를 비워 쉼지만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다시 중앙홀 농성을 재개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오는 15일까지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 재논의를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의정실로 복귀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을 현재에 청구기로 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고리로 "현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원내에서 같이 싸우자"는 명분을 내세워 사퇴 3인방을 원내로 컴백시키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의원직 사퇴 철회 및 복귀 권고를 결의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구했다.

민주당은 또한 김 의장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15일 직후 "야당의 권한 침해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 결정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을 현재에 청구기로 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고리로 "현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원내에서 같이 싸우자"는 명분을 내세워 사퇴 3인방을 원내로 컴백시키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의원직 사퇴 철회 및 복귀 권고를 결의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8일 오후 2010년 4대강 예산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당원협 지역사무소 허용 이견 정개특위, 쟁점법안 처리 '난항'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지역사무소 설치에 불만과 고비용의 부작용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풀뿌리 정당 정치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러나 표면적 이유 외에 지역사무소 설치에 원의 지역위원장들의 입김 강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많은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사·도위원을 뽑을 때 인구편차가 4대 1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사·도 의원 선거구 조정 문제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시·도위원회를 통해 선거구별 시·도의원수를 시·도 전체 선거구의 평균인구를 산출, 선거구 인구가 평균인구의 40% 미만일 때는 1명, 40~160% 미만 2명, 160~320% 미만 3명 등으로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민주, 날치기 반발... 본회의 불참키로

여야 예산안 대치 격화

말 많은 4대강 예산을 놓고 8일 날치기 논란이 일자 민주당이 이날 오후 속개될 예정이었던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등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이날 논란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소속 이병석 위원장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조 5천억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가결을 넘기면서 일어났다.

이 위원장은 의결 직전 "김형오 국회의장이 전날(7일) 오전 9시30분은

로 심사기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오늘 의결하지 않으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의원들이 주가한 예산이 유효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자마자 가결을 선포했고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이의 있습니다"라고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이 예산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제창 원내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과 이병석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하듯 강행 날치기 처리한 것"이라며 "원안대로도 아니고, 자기를 지역구

예산 3조4천억원을 올려서 날치기하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한나라당의 행태를 심토한 뒤 이날 오후에 다시 열린 예정이었던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의결할 때 각 안건에 대해 이의를 묻고, 이의가 있을 때 반대토론도 한 뒤 각각에 대해 의결하는 것이 맞다"며 "날치기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원칙과 법도가 있는데 이번에는 '날치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날치기'라고 맹비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종시 기업·연구기관 입주엔 지역 고급 인재 역외 유출 우려"

與 특위 광주서 간담회

한나라당 세종시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의화)가 8일 광주시청에서 개최한 세종시 관련 광주·전남 지역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광주·전남 지역의 R&D특구와 혁신도시·기업도시 조성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신용근 광주전라선업기획단장은 "세종시에 기업과 연구기관이 입주하면 R&D(연구·개발)특구를 조성하고 연관 산업을 유치하려는 광주와 대구에도 영향을 미치고 고급인재의 역외 유출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전영복 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세종시가 경제도시, 과학기업도시로 변모하고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광주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수도권과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국가균형 발전차원에서 세종시는 행정중심도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영순 목포상의회장은 "세종시 수정 문제는 충청인뿐 아니라 국가발전 방향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세종시 입주기업에 과도하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지방 입주기업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세종시 문제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정의화 위원장은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과거 독재국가처럼(국회가) 정부 방침에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심도가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주소창에 "한빛고시학원"만 쳐보세요

2010년 국가직 9급공무원 시험 4월 11일 합격하고 싶다면 한빛고시학원을 통하라!!

7.9급 공무원 합격설명회

일시 12월 17(목) 14:30 ~ 17:55 말고 시작하라!

(1월~2월) 2개월 완성반! 아무도 믿지 말고 한빛만 따르라!

행정직/ 세무직/ 경찰직/ 법원직/ 소방직
교육행정직/ 사회복지직/ 농업직/ 기술직/ 경찰직

대학생학점, 학점연속
모야간반
개강 1~4
평점/단과반
개강 1~4
(전원 2개월 완성)

한빛고시학원

자매학원 > 김영권입학원(광주 동부경찰서 뒤 02-227-8088), 한빛경찰학원(북구청 앞 02-262-3553)

반복학습만이 두배 빠른 합격을 보장한다

9종합반 6개월

(교재포함 100만원)

1개월 수강료 20만원, 교재금 189,000원

=정규수업외 회원의 특전=

1. 기초부터특강(전과목)
2. 전국 모의고사, 자체 모의고사
3. 동영상 무료제공
4. 책임담임제 관리

종합(1,2)반 수강생수 12월 2일~31일까지

고시학원의 대표브랜드

한빛고시학원

2012년까지 소방공무원 8,000명 증원예정

소방직 전문 소년기 학원

국내유망 시험장과 동일 소방체력육성기 도연

소방체력측정기 무료체험

가장경제적인 수강료 + 교재 5권 무료

6개월 합격학원비 90만원

이론강의 + 문제풀이 + 동영상 무료제공 + 체력측정

한빛소방직전문학원

광주 북구청앞 02-252-0252